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8년 11월 20일 | 책임조사역(G3) 이광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300천 km <sup>2</sup> 	<b>인구</b> 107백만 명 (2018 추정) 	<b>정치체제</b> 대통령중심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정책 
<b>GDP</b> 3,317억 달러 (2018 추정) 	<b>1인당GDP</b> 3,099달러 (2018 추정) 	<b>통화단위</b> Peso (P) 	<b>환율(U\$기준)</b> 52.9 (2018 추정) 

- 필리핀은 태평양에 둘러싸여 있으며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서국가임.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필리핀 경제는 2017년 6%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취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 인프라 구축은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분류됨.
- 2016년 6월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2018년 1월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 조세 개혁안이 시행되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한 외교 부문에서 역사적인 문제, 영유권 분쟁 등으로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실리적인 노선을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친서방 위주 대외전략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음.
- 지역 및 계층 간 소득격차, 이슬람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가운데 최근 무슬림 거주지역인 민다나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사모로 기본법'이 2018년 8월 제정됨으로써 테러 위협이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년, 1994년 및 2009년 개정), 무역협정(1978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85년), 이종과세방지협약(1986년), 투자보호협정(1996년),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2003년), 무상 원조기본협정(2014년), 군사비밀정보 보호 협정(2016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5	2016	2017	주요품목
수 출	8,317,925	7,278,420	10,593,713	전자·전기 제품, 광물성 연료, 산업용 전자제품
수 입	3,251,634	3,228,542	3,702,312	산업용 전자제품, 농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6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1,679건, 3,900,840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6.2	6.1	6.9	6.7	6.5
소비자물가상승률	3.6	0.7	1.3	2.9	4.9
재정수지/GDP	0.9	0.6	-0.4	-0.4	-1.0

자료: IMF, EU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2016년 경제성장률은 해외 근로자 송금 유입 등에 따른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에 힘입어 6.9%를 기록함. 2017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공공지출의 일시적 감소 및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한 6.7%임.
- 2018년에도 민간소비의 증가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른 투자 증가에 힘입어 6.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두테르테 대통령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임기 종료시까지 8~9조 페소(약 166조~187조 원)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 순위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97위로 저조한 수준임.

### 2018년 소비세율 인상, 유가 상승 등으로 가파른 물가상승

- 2016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 풍작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1.3%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및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9%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2018년 중 소비세 인상, 유가 상승, 폐소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8년 3월 전년동기 대비 4.3%를 기록하며 필리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2~4%) 상한을 초과하였음. 이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9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 대비 6.7%를 기록, 당초 예상치인 5.9%를 초과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조세수입 증대 및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포괄적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고, 2018년 1월 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유류세·자동차세 인상, 저소득층 대상 개인소득세 면제 등이 포함된 1차 개혁안을 시행 중임.
-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2018년 중 총 4회, 150bp 인상시켰으나(2018년 1월 3.0% → 2018년 10월 현재 4.5%),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 및 통화정책의 시차 등을 감안시 당분간 물가상승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국내경제

###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SOC 지출 확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예상

- 필리핀 정부는 정부재정 관리 및 개혁을 꾸준히 이행하여 정부부채를 2007년 GDP의 52.4%에서 2017년 40.0%로 감소시켜 온 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는 상황임.
-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 과열 또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부담을 과중시키지 않는 선에서 조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8년 1월 시행된 유류세·자동차세 인상 조치에 따라 세수가 증대될 것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수지 적자 폭 증가세는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외거래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sup>f</sup>
경 상 수 지	10,756	7,266	-1,199	-2,163	-4,859
경상수지/GDP	3.8	2.5	-0.4	-0.7	-1.5
상 품 수 지	-17,330	-23,309	-35,549	-40,505	-45,510
상 품 수 출	49,824	43,197	42,734	51,865	58,254
상 품 수 입	67,154	66,506	78,283	92,370	103,764
외 환 보 유 액	70,260	72,352	71,853	71,598	68,653
총 외 채	77,021	80,548	77,848	75,549	73,749
총외채잔액/GDP	27.1	27.5	25.5	24.1	22.2
D.S.R.	7.6	6.9	8.6	7.1	6.3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적자 확대로 2016년부터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13~15년에는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아웃소싱 산업(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과 관광업에 따른 서비스수지 및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2002년부터 14년 연속 흑자 기록).
- 그러나, 2016년 이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12억 달러, GDP 대비 -0.4% 수준)한 이후 2017년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였음.

\*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액(억 달러) : 262('14년) → 305('15년) → 320('16년) → 356('17년)

자본재 수입액(억 달러) : 161('14년) → 196('15년) → 287('16년) → 300('17년)

자료 : 필리핀 통계청

###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전망

- 향후 필리핀의 경제성장 추세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감안시 2020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54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 적자 전망(억 달러) : -50('18년<sup>e</sup>) → -52('19년<sup>f</sup>) → -54('20년<sup>f</sup>)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전망(%) : -1.5('18년<sup>e</sup>) → -1.5('19년<sup>f</sup>) → -1.4('20년<sup>f</sup>)

자료 : EIU

## 대외거래

### 2018년 대외적 영향으로 폐소화 가치 급락

- 2018년중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필리핀,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임.
- 2018년 9월 말 기준 필리핀 폐소화 가치는 달러당 54.03페소로 연초 대비 8.4% 평가절하되었음. 이는 2017년중 월말환율의 최대 변동폭(3.5%)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 중임.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이나 모니터링 필요

- 필리핀의 외환보유액은 2017년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확대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716억 달러를 기록하여 월평균수입액 대비 6.8개월 수준, 단기외채 잔액의 4.7배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음.

\* FDI 유입액(억 달러): 57('14년) → 56('15년) → 83('16년) → 101('17년)

자료 : 필리핀 통계청

- 그러나, 2018년 폐소화 가치 하락에 의한 자본 유출 및 폐소화 가치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2018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017년 말 대비 5.4% 감소한 679억 달러를 기록하여, 향후 외환보유액 추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경제규모 대비 외채 비중은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높은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24.1%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또한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이 약 81%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수출이 증가하였고, 원리금상환액이 점차 감소\*하면서 2016년 8.6% 이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임.

\* 외채원리금상환액(억 달러) : 56.0('15) → 72.0('16) → 69.9('17) → 68.2('18°)

\*\* D.S.R.(%) : 6.9('15) → 8.6('16) → 7.1('17) → 6.3('18°)

자료 : OECD

## 구조적 취약성

### 제조업 기반 취약으로 상품수지 적자 지속 확대

- 과거 농림·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 추진, 정치적 불안, 낮은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으로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제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고, 자본재, 소비재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지속 기록 중이며 최근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 GDP 대비 제조업 비중(%) : 23.3('14) → 23.2('15) → 23.2('16) → 23.6('17) → 23.9('18<sup>e</sup>)

\*\* 상품수지(십억 달러) : -17.3('14) → -23.3('15) → -35.5('16) → -40.5('17) → -45.5('18<sup>e</sup>)

자료 : EIU

- 2018년 6월 확정된 2018-22 필리핀 수출 개발계획(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PEDP)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규모를 2017년 기준 687억 달러 수준에서 1,20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자 함.

< 필리핀 경제 부문별 GDP 비중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sup>e</sup>
농업 부문	10.03%	9.47%	8.75%	8.53%	8.25%
산업 부문	33.37%	33.49%	33.86%	34.01%	34.33%
제조업	23.26%	23.17%	23.21%	23.58%	23.84%
비제조업	10.11%	10.32%	10.64%	10.43%	10.49%
서비스 부문	56.60%	57.04%	57.39%	57.46%	57.42%

자료 : EIU

###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필리핀은 세계 4대 해외인력 송출국으로서 2017년 말 기준 해외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며,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2017년 기준 289억 달러(GDP의 10% 수준)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고 유지, 국내소비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정부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해외 취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중이나, 송금액 증가가 국내에 장기적인 자본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필리핀 정부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을 꾀하는 중임.

## 성장잠재력

### 인프라 개발을 주요 동력으로 한 경제부흥 정책 지속 추진

-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6년 동안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목표로 한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개별 프로젝트가 총 4,895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한 2017년 5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관련 약 1,800억 달러(약 185조 원)가 인프라 개선에 투자될 것임을 공언하였고, 필리핀 투자청 국장은 2018년 7월 현재 GDP의 6.3% 수준인 인프라 지출을 2022년까지 7.3%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세 지속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예상됨.
- 필리핀 정부의 1년 예산이 750억 달러 수준임을 고려시 외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민·관 합작 프로그램(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개발잠재력 보유

- 필리핀은 광물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단위면적당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임(금 세계 3위, 구리 4위, 니켈 5위). 필리핀 국토의 30%가 광물자원의 산지로 분류된 가운데 개발허가권 부여 면적이 광물 매장지역의 2%에 불과하여 향후 개발잠재력이 큼.
- 대법원의 1995년 광업법 합헌 판결(2004년)로 외국인의 자원개발 투자가 허용되었음. 다만, 두테르테 정부 출범 이후 환경 보호를 이유로 23개 광산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등 광산 규제\*가 엄격해짐.
  - \* 필리핀 정부가 광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연간 약 700억 페소(약 1.5조 원) 수준이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세수 확보보다 환경 보호를 더 강조하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BPO 산업환경 유지

- 풍부한 영어구사 인력, 저렴한 인건비, 인터넷 기반의 통신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업무처리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 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 BPO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입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각종 비즈니스에서 수행되는 업무 아웃소싱 전문산업을 의미하며, 세계 BPO 시장은 2020년까지 약 2,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콜센터 협회에 따르면 필리핀 내 BPO 산업 규모는 2016년 기준 필리핀 전체 GDP의 약 17% 수준이며, BPO 산업 근로자수는 2016년 기준 전체 필리핀 노동자수의 1.4%에 해당함.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Tholons의 2017년 100대 세계 BPO 지역 순위(Tholons 2017 Top 100 Outsourcing Destinations)에 따르면, 필리핀의 마닐라가 4위를 차지함(1위는 인도의 벵갈루루임.)
- 다만, 현재 필리핀 BPO 산업의 약 70%가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인 것을 감안할 때, 미국 트럼프 정권의 국내기업 보호정책은 동 분야의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성과

### 2015~17 필리핀 수출 개발계획(PEDP) 추진에 따른 수출 증가

- 경제성장을 위한 수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2015~2017 PEDP 추진 결과, 필리핀의 상품 수출은 2017년 전년 대비 9.5% 증가하며 당초 수출증가율 목표치(7.7~10.6%) 달성에 성공하였음. 필리핀 상품 수출증가율은 2015년 -5.3%, 2016년 -2.4%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전기·전자제품 및 광물자원 수출 증가로 정(+의 흐름을 보임.
- 다만, 수출의 대부분(2017년 기준 57.1%)을 차지하는 전기전자(반도체) 부문은 반도체 시장의 업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제조업 부문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개선 및 수출 증대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상위 중소득 국가 진입을 위한 필리핀 개발계획(PDP) 추진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The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은 2016년 10월 수립한 장기 개발계획인 '국가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 구현을 위한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을 2017년 3월 발표함.
- 동 계획은 2022년까지 ①상위 중소득 국가(upper middle income country : 1인당 GNI가 U\$3,956 ~ U\$12,235 범위 내인 국가로, 필리핀의 2017년 1인당 GNI는 U\$3,660) 진입, ②빈곤율을 30%에서 20%로 완화, ③실업률을 5.5%에서 3~5%로 축소 등을 목표로 함.
- 필리핀 정부는 상기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조세개혁,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2016년 12월 창립회원국)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천 중임.

### 포괄적 조세개혁 추진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5월 대선 직후 빈곤 퇴치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음(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RAIN).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빈곤율 축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세제 개혁안을 단계별로 입법 및 시행 중임.
- 필리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세원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 개요 >

구 분	내 용
Package 1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유류세·자동차세 조정 등
Package 2	법인세율 5%p 인하(30%→25%), 기존 보조금 삭감, 조세 공정성·투명성 강화
Package 2+	주류 및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조성된 Universal Health Care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 2020년 시행
Package 3	통합된 부동산 가치 측정 시스템 도입 및 부동산세 인상, 신설
Package 4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 필리핀 재무부

## 정책성과

- 2018년 1월 시행된 Package 1은 개인소득세 감세(연봉 25만 페소 이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유류세 증세 및 신설(디젤, LPG에 세금 도입), 설탕세 신설, 자동차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함.
-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디젤에 리터당 2.5페소의 세금이 부과되었고(신설), 가솔린은 기존 리터당 4.35페소에서 7페소로 세율이 인상되었음.
- 한편, 최근 유가 상승 추세 속에서 물가상승 압박, 세금 부과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추가 인상안(리터당 디젤 4.5페소, 가솔린 9페소)은 2018년 10월 현재 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음.
- 또한,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대신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Package 2는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 2018년 10월 현재 필리핀 상원에 계류 중임.
- 기존 보조금 수령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청장이 조세개혁에 대한 반대 청원을 한 상황을 고려시 2차 조세개혁 프로그램의 입법 및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Package 3, 4는 2018년 7월 말 하원에 제출된 상태이나, Package 2의 처리 지연으로 당초 필리핀 정부가 목표했던 연내 입법 및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 정치동향

### 2018년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말 취임 직후 91%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 2016년 대선 당시 두테르테 후보는 마약과의 전쟁, 연방제 시행, 내전 종결, 3자녀 제한 정책, 부패 척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동 공약은 기존 부패 정치와 마약 범죄 근절, 필리핀 경제 회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맞물려 두테르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크게 이바지함.
- 그러나 2018년 중 인플레이션 압박, 미미한 개혁 성과,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였음.
- 2018년 9월 말 기준 필리핀의 물가상승률은 6.7%(전년동기 대비)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물가상승 압박과 포괄적 조세개혁에 따른 세금 부과에 과중한 부담을 느낀 필리핀 대중의 지지도가 2018년 6월 88%에서 9월 초 75%를 기록하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필리핀 정부는 2016년 6월 이후 1년간 마약 거래가 약 26% 감소하고 주요 범죄가 29%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가혹한 형벌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 증가, 범죄 소탕 과정에서의 재판 없는 처형 용인, 수용 능력을 초과한 교도소 내 수감자의 처참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음.
- 소수 재벌과 토착 세력의 경제권 지배, 가문·족벌 정치 중심의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이나, 2018년 현재로서는 2019년 5월 실시 예정인 상하원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며, 이후 정치·경제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사회동향

### 이슬람 자치정부 수립 기본법 제정으로 테러 등 사회 위협요인 감소

- 무슬림 비중이 높은 민다나오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필리핀 영토가 되면서 가톨릭 세력이 이주한 이후 이슬람 세력과 필리핀 정부 간 무력 대치상태가 지속되어 왔음.
- 민다나오 지역 최대 이슬람 무장조직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1977년 결성 이후 40여 년간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필리핀 정부와 갈등을 빚어 왔으나, 2018년 8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사모로 기본법'에 최종 서명하며 오랜 갈등이 종식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임.
- 동 법에 따르면 민다나오 지역에는 무슬림 자치정부와 80석 규모의 의회가 들어서며, 민다나오 지역 세수의 75%가 자치정부에 귀속될 예정임.
- MILF는 이에 맞춰 단계적인 무장 해제, 분리 독립 활동 중단을 공언한 바, 사회불안 요인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동향

### 계층 간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 상존

- 2015년 기준 세계은행의 빈곤선인 '일평균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은 8.3%로 2012년 12.1%에 비해 낮아졌고, 빈곤층 비율도 21.6%로 2012년 25.2% 대비 개선되었으나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29.5%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중산층 비중이 미약한 상황임.
- 필리핀의 지니지수는 2012년 46.1에서 2015년 기준 43.0으로 하락하였으나, 베트남(37.6), 태국(37.8), 인도네시아(42.8)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국제관계

### 중국과의 관계 개선

- 현 정부는 '친미 반중'으로 요약되는 전(前)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오랜 갈등의 원인이었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상설 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경색되었음.
  - \* 남중국해 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관할권과 관련된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6개국 간의 해양 영토분쟁임. 남중국해는 원유(110억 배럴), 천연가스(190조 평방피트) 등 풍부한 에너지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전 세계 해상무역량의 40% 이상이 통과하는 곳으로 해상 물류의 핵심 거점임.
  - \*\* 판결에 따른 강제력은 없으며, 분쟁 상황은 2018년 11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 10월 베이징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이슈가 언급되지 않는 대신 양국이 국방 및 해양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중국은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동 정상회담에서 필리핀은 중국의 필리핀 고속철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약속 및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금지 해제조치를 얻어냄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찾은 것으로 분석됨.
- 한편, 2016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이후 가시적 성과는 2018년 11월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필리핀 답방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 국제관계

### 일본과 우호적 관계 지속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2008년 양국간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발효이후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
- 필리핀의 최대 투자국인 일본의 2017년 대 필리핀 투자액은 320억 페소(약 6,730억원)로, 필리핀의 동년 외국인투자 유입액의 30.3%를 차지하였음. 또한 2017년 1월 필리핀을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는 향후 5년간 필리핀에 약 1조 엔 규모의 정부원조 및 민간투자 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 냉각

- 미국은 1898년 이후 약 50년 간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1935년 필리핀 자치정부 수립 및 1946년 독립 이후에도 필리핀의 치안·국방 분야의 필요에 의해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등 필리핀에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쳐 왔음.
- 1951년 체결된 양국 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이후 최근에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상황에서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체결로 2016년 1월부터 필리핀 내 8개 군사기지에 미군이 주둔 중임.
- 그러나,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짐.
-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통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인프라 투자 자원 마련 등 실리적인 관점에서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필리핀 간 유의미한 외교적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양국 관계의 변화는 2017년 미-필리핀 합동 군사훈련 규모가 축소되고, 2017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중 개최된 미-필리핀 정상회담이 별도 기자회견이나 공식 성명 없이 마무리된 점에서도 잘 드러남.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 양호

- 1984년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84년, '87년, '89년, '91년, '94년)에 걸쳐 채무재조정을 받는 등 외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음.
- 그러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고, 2017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승인액은 단기 16.4억 달러, 중장기 17.7억 달러 등 총 34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이 없는 등 채무상환태도가 개선되었음.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18.06)	3등급(2017.06)
Moody's	Baa2 (2017.12)	Baa2 (2014.12)
Fitch	BBB (2017.12)	BBB- (2017.03)

### 투자적격 신용 평가등급 유지

- 국제신용평가 3사는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외채 및 정부채무 비율 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7년 12월 거시경제지표 개선 및 양호한 정부 정책 추진 등에 근거하여 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였음.

- 필리핀 경제는 최근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지며 2018년 6.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을 감안시 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는 등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하며, 2018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 22.2%,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도 21.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취약한 제조업 기반, 인프라 구축 미비 상황,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폐소화 가치 하락은 필리핀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류됨.
- 2016년 6월 집권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개혁과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운동 등을 추진중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실리적인 노선을 추구하여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 협력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이상을 고려하여 필리핀의 신용등급은 기존 등급과 같은 C1으로 정하고자 함. 향후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포괄적 조세개혁의 완전한 시행 및 제조업 육성정책의 성패가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